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인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동참해주세요

2025년 제 42호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01

李대통령,국무회의서 "체육계 폭력X'약자'신고 익명성" 언급...

조선일보 전영지 기자

02

대한체육회장, 직선제 선출·2연임 불가로 바꾼다

뉴스1 김도용 기자

03

"내 아들 패던 선배가 펜싱 엘리트래요"...체육고 합격 문제없다는데

매일경제 박자경 기자

04

道の회 정동혁 의원,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운영 부실' 강력 질타

경인매일 최승곤 기자

05

"도체육회 국대급 선수 유출 방지 절실...태백체육회 성희롱 문제 소극 대응 지적"

강원일보 윤종현 기자



01

李대통령,국무회의서 "체육계 폭력X'약자'신고 익명성'" 언급→스포츠윤리센터" 신고자X피해자 보호 '가명조사 제도' 전면도입"

조선일보 전영지 기자
2025.11.14. 17:45
사진=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신고인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명 조사 제도를 전면 도입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4에 따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를 알게 된 경우 누구든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의 신고도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면서 "신고인 또는 피해자의 2차 피해 가능성을 줄이고 신원 노출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자 가명 조사 체계'를 새롭게 도입하여 조사 신뢰성을 대폭 끌어올렸다"고 했다.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열린 제49차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업무 현안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체육계 폭력 문제와 익명신고 제도와 조사 시스템의 개선을 언급한 직후 문체부와 스포츠윤리센터가 신속한 피드백을 내놨다.

이날 이 대통령은 "체육계 폭력 문제는 언제나 문제다. 지금도 여전하다고 한다. 은폐돼서..., 이것에 대책도 추가로 세워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대해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도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라면서 "대한체육회와 분리돼 스포츠윤리센터가 언제든지 신고하고 감시할 체계는 마련됐다. 70~80명 정도가 움직이고 있는데 예산을 좀더 지원해 좀더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스포츠윤리센터 연도별 신고·처리 현황



01

이 대통령은 "체육계 폭력뿐 아니라 중소기업 기술 탈취, 원가 후려치기 등에서도 약자들은 혹시 신고하고 문제 삼았다가 자신이 피해를 입을까봐 말을 못한다. 이부분은 다른 부처도 다 해당된다. 공정거래위 신고도 그렇다고 한다. 누가 신고했는지 실질적으로 다 알게 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신고를 못한다"면서 "제도적으로 익명화할 수 있는 조사방법이 필요하다. 누군가 신고를 하면, 그것만 조사하면 딱 드러난다. 기본적으로 제보는 다 익명으로 처리하고 일반적인 조사, 포괄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리사회 약자 그룹들은 언제나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말을 못한다 체육도 비슷하다. 익명을 철저히 보장하고 어느 지역, 어느 단체가 문제가 있다면 그 지역, 단체를 포함해 동시에 몇 군데를 한꺼번에 조사해 드러나지 않게 하는 방식을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스포츠의 경우 특히 학교에서 매우 폐쇄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가 겁을 먹어 신고도 잘 못하고 있다. 대통령님 말씀처럼 조사하는 방법에서도 기술적인 방법을 찾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교육부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선수는 일정한 성적이 나지 않으면 장래가 없다. 그래서 지도자의 폭력에 저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퇴출 후 지역의 다른 단체로 가서 활동하는 경우다. 같은 종목 안에서 서로 네트워크가 잘돼 있어 서로 밀어주는 게 있다"면서 "스포츠계 전체에서 작은 학교 지도자조차도 갈 수 없게 근본적인 퇴출이 고민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이 "현재 그렇게 퇴출되고 있다. 지도자 자격 자체가 박탈돼 다시는 활동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래서 저번 그 양궁선수는 어떻게 됐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라고 지난 8월 정치적 성향을 담은 글을 SNS에 지속적으로 올려 논란이 된 양궁 국가대표 이슈를 직접 챙겼다. "이의 신청도 있고 해서 시간이 걸린다"는 답변에 이 대통령은 "뭐든지 너무 지연되지 않게 신속하게 시간을 질질 끌지 않게 진행 했으면 좋겠다"며 신속한 실행을 주문했다.

사실 최근 체육 현장에서 '약자들의 신고'는 증가 일로다. 빙상계 성폭력 사건 후 신설된 스포츠윤리센터가 예산, 법안 개정 등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가면서 사건이 발생하면 일단 '스포츠윤리센터'로 우선 신고해야 한다는 매뉴얼이 현장에 어느 정도 자리잡은 모습이다. 오히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신고를 제한된 조사관 인력에 수사권도 없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조사하고, 처리하고, 감당하는 것이 당면한 숙제다. 인력과 예산을 매년 늘리고, 조사관들이 밤낮없이 열일하고 있지만 쏟아지는 신고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역부족인 현실이다.

01

스포츠윤리센터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스포츠윤리센터에 접수된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사건은 총 1231건으로 작년 동 기간(648건) 대비 90% 증가했다. 특히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건은 기존 290건에서 71%가 증가한 497건이 접수돼 센터 출범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사건 처리 건수도 기존 604건에서 71%가 상승한 1033건, 사건 처리를 위한 평균 소요일수도 기존 152일에서 25일 단축된 127일이다.

박지영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은 "신고 접수와 처리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체육계 구성원들이 센터를 신뢰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의미"라면서 "특히 학생선수들의 폭력 및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용기 내어 신고한 뒤, 신고자를 추적하거나 따돌리는 형태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육계 전반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포츠윤리센터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국민이 모두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제도적 장치를 계속 보완하고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대한체육회장, 직선제 선출·2연임 불가로 바꾼다

뉴스1 김도용 기자

2025.11.12 오후 02:59

사진=뉴스1 민경석 기자

대한체육회가 회장 임기를 1회에 한해 연임가능으로 제한하고 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변화하는 등 혁신에 나선다. 이와 함께 징계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예산 투명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휘영 문화체육부장관은 1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정부는 체육단체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존중, 직접 관리 감독에 제한이 있었다. 이에 체육회에 대해 여러 논란이 거듭됐다"면서 "권한 남용과 불투명한 운영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는 시도체육회와 각 종목 단체도 다르지 않다. 체육계 특유의 상명하복식 권위주의와 폐쇄적인 문화가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보고했다.

이어 "문체부는 체육 단체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해 올해 초 새롭게 유승민 회장 체제로 구성된 체육회와 함께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문체부와 체육회의 혁신 방안은 △공정한 인사 △명확한 징계 절차 △투명한 예산 편성이다.

구체적으로는 대한체육회 회장 임기를 1회만 연임 가능하도록 정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최휘영 장관은 "(체육회장이) 자기 세력을 구축, 사실상 종신제처럼 권력을 누린다는 비난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회장 선거도 소수의 선거인단이 뽑는 간선제가 아니라 직선제로 온라인 투표가 가능하도록 바꿔 현장 선수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체육회를 시작으로 시도 및 종목 단체장도 단계적으로 변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엄청나게 혁신적"이라면서 "(임기를) 두 번 연속하고, 쉬었다가 다시 하는 것은 가능하다. 총 임기는 제한해야 하지 않느냐"면서 연임뿐 아니라 중임까지 제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02

더불어 체육회는 징계 기구인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대한변호사협회 등 외부 6개 기관에서 추천받도록 제도화하고, 임원의 비위 징계는 의무적으로 상위 기관에서 다루도록 해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은 체육회장 입맛 대로 임명할 수 있었다.

최 장관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금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엄정히 해서 예산 편성과 임직원 인센티브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예산과 관련한 혁신안도 공개했다.

이어 "국고뿐 아니라 후원금 등의 자체 예산도 문체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체육회가 회원 단체에 배분하는 사업도 정산 책임을 강화해서 예산의 투명성을 높ی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체육회 혁신에) 강한 의지가 있다. 문체부는 잘 돕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내 아들 패던 선배가 펜싱 엘리트래요"...체육고 합격 문제없다는데

매일경제 박자경 기자

2025-11-16 19:22:22

사진=연합뉴스

후배들에게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가한 중학교 펜싱 특기생 A군(16)이 충청권의 한 체육 고등학교 특기생 입학 명단에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학폭 이력이 드러나면 국가대표 자격도 박탈되는데, 체육고 입시만 유독 가해자에게 관대하다는 지적이다.

16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A군은 경기 소재 중학교 재학 당시 후배들을 상대로 괴롭힘을 일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레슬링 명목으로 복부를 가격하고, 업어치기를 하는 등 상습 폭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측은 “훈련 명분으로 피가 날 정도로 목을 찌르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A군은 올해 7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사회봉사(4호) 처분을 받고 생활기록부에 학폭 조치 사항이 기재됐다. 6개월간 대회 출전도 제한됐다.

그러나 A군을 입학시킨 B체고 측은 “입학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학교 측은 “교육청 선발 기준에 학교폭력 처벌을 받은 학생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며 “생기부에서도 교과 내신 성적만 입결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 교육청의 고입 체육특기자 배정 기준에도 ‘학교폭력 이력’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다.

매일경제는 이와 관련해 A군 부모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한편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체육특기자 선발 시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충북을 포함해 충남·광주·대전·경기·전북·전남·경남 8개 교육청은 학폭 여부를 선발 기준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개 교육청도 ‘전학(8호) 이상 대상자만 선발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배 가해자가 체육고에 먼저 입학하면 후배 피해자는 해당 학교를 피해 다녀야 하는 구조가 자리 잡는 셈이다.

교육계에서는 이 같은 제도의 허점이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고입 전형에서 학교폭력 제재 규정을 마련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고등학교에 입학해서도 제2·제3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며 “명시된 규정이 없더라도 이번 기회에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학가와 체육계에서는 일제히 학폭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서 “단 한 번의 폭력 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자 프로 배구 선수 이재영·이다영 자매도 중학교 시절 학폭 논란으로 국가대표 자격이 박탈됐다.

서울대·경북대 등 국립대학교에서 역시 학폭 이력으로 입시에서 탈락한 학생이 나왔다.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대학은 학폭 기록을 입시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한다.

도의회 정동혁 의원,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운영 부실’ 강력 질타

경인매일 최승곤 기자

2025.11.13 17:00

사진=경기도의회

11월 13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19회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e스포츠 경기의 운영 부실을 강하게 지적했다.

정 의원은 “대회 운영 미흡으로 한 선수가 사전 안내 없는 경기 시간 변경 때문에 준결승전에 출전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히며 공정하고 일관된 운영 매뉴얼 마련을 촉구했으며, 정 의원에 따르면 해당 선수는 오전 예선전 종료 후 점심을 먹고 있었으나 운영진이 예고 없이 경기 시간을 앞당긴 채 전화 안내 없이 경기를 강행해 출전이 무산됐다.

또한, 정 의원은 “운영진은 고양시 선수만 부재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호명만 했고 약속했던 전화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선수는 점심을 먹은 본인이 잘못했다고 자책하며 현장에서 울음을 터뜨렸다”고 말하며 현장의 혼란을 전달했다.

운영 부실은 시간 공지 문제를 넘어 기술적 결함으로 이어졌고, 정 의원은 “오전 예선전에서 선수 전원이 입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를 시작해 재경기가 반복되고 컴퓨터 전원 꺼짐·네트워크 불안정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준비 부족을 비판했으며, 다른 선수들은 경기가 언제 변경될지 몰라 점심도 먹지 못해 대기 환경 역시 열악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장애인체육회의 대응 태도도 문제로 삼았으며, “장애인체육회가 선수 설명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운영업체 주장만 수용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지적하며, “문제 제기 과정에서 ‘전문체육이 아닌 생활체육’이라는 식으로 상황을 축소하려 한 것은 장애인생활체육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부적절한 태도”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생활체육대회라도 장애 특성과 권리를 고려한 공정한 운영 매뉴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보고자료에는 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한 공정한 대회 개최를 실적으로 적어놓았지만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안내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하며 운영 대행업체 선정과 관리감독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04

아울러 정 의원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외부체감도 2년 연속 최하 등급을 받고 내부체감도도 낮다”며 조직 신뢰 회복을 위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수 팀장 공석과 반복된 고위직 채용 실패 등 인력 구조 문제도 짚으며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조직에는 이유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끝으로 정동혁 의원은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의 부실한 운영을 개선하고 공정한 경기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종합청렴도 문제까지 드러난 만큼 조직 운영 체계를 재정비해 도민과 선수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05

"도체육회 국대급 선수 유출 방지 절실...태백체육회 성희룡 문제 소극 대응 지적"

강원일보 윤종현 기자

2025. 11. 13. 00:01

사진=강원일보

국가대표급 실력을 갖춘 강원 출신 체육선수들이 부족한 연봉과 실업팀 부재 탓에 타 지역으로 등지를 옮기고 있다. 26년 만에 전국체전 '종합 6위'이라는 대기록을 세운 강원 체육계의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인재 유출 방지책이 요구된다.

12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회 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된 도내 국가대표급 유출 선수는 총 10명이었다. 이 중 8명이 '고액 연봉'을 이유로 수도권과 부산, 충남, 울산, 대전 등지로 팀을 옮겨갔다. 일부 선수는 도내에 실업팀이 없어 강원을 떠났다. 대학 재학을 위한 유출도 있었다.

인재 보호를 위한 도체육회-시·군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박기영(국민의힘·춘천) 의원은 "큰 자본을 갖춘 프로팀으로 옮겨가는 걸 막는 건 어렵더라도 기초지자체로의 유출은 도체육회 관심과 지원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수·지도자 수준에 맞는 연봉 지급을 강조한 조성운(국민의힘·삼척) 의원은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현장 인력의 처우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지적들에 도체육회는 유도·수영 등 종목에서 최상급 선수를 영입한 데다 선수 및 가족, 지도자 측과 유대감을 쌓는 데 힘 쏟고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 시·군 조례 개정을 통한 영입비·연봉 지원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성과에 맞는 적절한 선수·지도자 연봉 지급관리도 약속했다.

태백시체육회장 성희룡 논란 등에 대한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기홍(국민의힘·강릉) 의원은 "도체육회보다 대한체육회의 대응이 더 빨랐고 결과 역시 '견책'에 그치며 사안에 비해 적절치 않았다"며 도체육회의 고위직 성희룡·성폭력 예방교육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임미선(국민의힘·비례)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이승진(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엘리트-생활체육간 균형적인 지원 예산 배분을 당부했다.



체육 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여러분의 후원이 건강한 스포츠 사회를 만듭니다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인권과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문화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후원: 국민은행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연말 기부금 영수증 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s://www.sportscm.org/%ED%9B%84%EC%9B%90%ED%95%98%EA%B8%B0>